북핵 6자회담 내일 재개

각국 대표들 속속 베이징 도착…양자 접촉 개시

9개월여간 열리지 못했던 북핵 6자회담이 드디어 재개 프로세스에 돌입했다.

중국은 8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 개최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더욱 진일보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10일부터 6자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는 잠정적으로는 3일로 예정돼 있지만 실제 개최기간은 회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동성명 또는 다른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평가 ▲검증체계 수립 ▲2단계(불능화 및 신고) 완료와 3단계(핵포기) 협상개시 문제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소개한 뒤 "북한의 궁극적인 핵포기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수석대표 일정 간간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회의 등이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무한정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날 베이징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수석대표들간에 양자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본부장의 경우 6자회담 개막 이전에 다른 참가국 수석대표들과 적어도 한 차례씩은 양자대화를 가진다는 생각이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의 베이징 도착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일 전에는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간 양자접촉은 이르면 8일중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의 분위기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회동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첫 조치인 '의회통보'를 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 조치가 발효되려면 8월11일 이전에 핵 신고서에 대한 확실하고도 완전한 검증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日 도착…G8 일정 시작

이명박 대통령이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오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도착해 영접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도착, 1박 2일간의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50분께 전용기편으로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공항에서 숙소인 게이오 플라자 호텔로 이동, 곧바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방일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 일정은 한국과 같은 G8회의 초청국인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 경제 3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의 첫날 회담은 30분간의 약식 회담 성격이었지만 회담의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회담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문제 해결 후 국제사회에 나오려면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G8 정상 "세계 경제 중대한 시련 직면"

경제분야 정상 선언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8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이틀째 정상회의에서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에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경제분야 정상선언에서 "원유·식량가격 급등으로 세계 경제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정상들은 원유·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을 경계하면서 "세계 경제는 후퇴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상들은 원유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기자금의 감시 강화를 위해 G8 각국 당국이 협조해 원유 선물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유국에는 증산과 생산 능력 증강, 소비국과의 활발한 대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소비국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또 "경제 안정을 위해 G8가 결속해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고 밝히고 금융자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및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협상의 조기 타결도 촉구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한 달러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평가되는 투기자금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는 G8 각국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G8 '정상선언' 뭘 담나

원유 투기 자금 철저 감시 식량 수출 규제 철폐 촉구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이틀째인 8일을 맞아 G8 정상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가, 환경, 안보 문제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상들은 이날과 마지막날인 9일 정상선언 및 식량·테러대책에 관한 특별문서 등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공개한다.

그동안 전해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선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유, 식량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 경제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수입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원 다양화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가 결국은 산유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양측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가안정을 위해 각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교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및 온실가스 삭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담게 된다.

또 문서에는 식량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그 원인 중 하나인 식량 수출 규제 철폐를 식량 생산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모든 핵보유국에 투명성을 갖고 핵무기를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뤄지면 G8 정상회의 문서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감축을 명시하게 되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온난화대책의 경우 2050년까지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장기 목표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의 참가를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합의,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6급 이하도 60세로…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

김동철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민주·광주 광산갑) 의원은 8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공무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되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방호 및 등대, 경비관리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일화된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통 "6·15, 10·4 입장 표명 통해 北과 대화 나서야"

李 대통령에 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평통의 이번 건의는 그동안 6·15, 10·4 선언에 대해 별반 언급을 하지 않아온 이 대통령이 이들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평통은 6·15, 10·4선언과 관련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비공식 특사 파견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추진 ▲8·15 경축사를 통한 새 대북정책 종합구상 천명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대화여건 조성 등을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8일 홈페이지(www.nuac.go.kr)를 통해 밝혔다. 평통의 정책 건의에는 이 외에도 정부내 대북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통일 관련 네트워크 및 대 국민 소통 확대, 북핵 신고 검증 및 핵 폐기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 제고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